

일본, 농림수산 관련 보정예산 3,871억엔 제시

■ 농림수산분야의 보정예산 핵심은 TPP 대비

2015년도 농림수산분야의 보정예산 원안이 15일 밝혀졌다.. 총액은 3,871억엔으로 축산 및 발작물 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 대규모 농지에 연결되는 토지개량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환태평양연계협정(TPP) 발효에 앞서 국내 농림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서둘러 외국산의 유입에 대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에 보정예산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농림관계 의원중에는 총액 4천억엔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PP로 수입이 증가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이나 낙농분야는 지역에서 경쟁력 강화를 진행하는 사업에 569억엔을 계상했다.

2015년 보정예산 농림수산분야 포인트

- 총액은 3,871억엔으로 환태평양연계협정(TPP)의 발효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골자
- 지역에서 축산·낙농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569억엔, 발작물(畑作) 등 축산·낙농 이외의 농업분야로, 지역의 영농전략에 근거한 체질을 강화하는 사업에 483억엔 배정
- 토지개량 관련에 계 990억엔 배정
- 제분 및 유업 등의 공장 재편성 지원사업에 46억엔
- 리스 방식에 의한 후계자예의 선박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185억엔을 배정하고 기금을 설치

■ 전년보다 1,100억엔 증액, TPP 관련 2,985억엔 계상

일본 농림수산성은 환태평양연계협정(TPP) 관련대책이 중심으로 총 3,871억엔 중 2,985억엔을 편성해서 여당에 제시했으나, 여당측에서는 더 많은 예산배정을 요구하여, 농림성은 총액 4,000억엔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당국과 재차 조정할 계획이다.

농수성이 제시한 농림수산관계 15년도 보정예산안은 14년도 보정예산 2781억엔 보다 약 1100억엔 많다.금회의 보정예산안은 TPP교섭의 대략 합의 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TPP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당측은 증액을 통해 국내대책의 재원확보를 요구한 모양새다.

최대의 핵심인 TPP 관련대책에는 2,985억엔. 축산 클러스터사업(축산·낙농 수익력 강화 정비 등 특별대책사업)에 569억엔, 산지 파워업 사업에 483억엔을 계상했으며, 양 사업 모두 복수년도에 걸쳐 사용하는 기금방식이다. 후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질 무이자화 등의 금융대책도 기본방식으로 100억엔을 포함시키고 있다.

공공사업은 1,448억엔 규모이다. 농업농촌정비(토지개량) 사업 관련해서는 농지의 대구획화·범용화에 370억엔, 수전의 전(밭)지화 및 전지(밭)·수원지의 고기능화에 406억엔, 축산클러스터를 후원하는 초지의 대구획화에 164억엔 등을 계상하고 있다.

TPP 대책 이외로는, 15년산의 사료용 쌀 및 보리·대두 등의 생산확대로 지출이 증가하는 수전활용 직접지불교부금의 재원으로 160억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우 및 태풍에 의한 농지피해 등의 복구에 158억엔을 계상했다.

예산액은 어디까지는 15일 시점의 것으로, 재정 당국과의 절충에 따라서는 증감할 수 있다.

(출처 : 교도통신, 동경신문, 일본농업신문 12.15~16일자)

■ 시사점

- TPP 체결 합의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농림수산분야의 보정예산은 일본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년에 비해 1,100억엔이나 증액을 했음에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게 여당의 입장이다.
-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축산·낙농분야의 예산투입, 이외에도 농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 한국도 향후 TPP가입, FTA확대 등 시장개방에 맞춰 한국농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일본 정부당국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